

‘웅담 착취’ 서 벗어난 곰아, ‘요양병원’ 서 편히 쉬렴

구례에 전국 처음으로 문 연 사육곰 보호시설 가보니

시력 잃고 다리 없고 이빨 빠지고... ‘만신창이’ 10마리 입소
마산면에 2만5744㎡ 규모...수의사 상주 건강상태 등 점검

40여년간 웅담(곰의 쓸개) 채취를 위해 3.3㎡(1평) 남짓의 뜰장(바닥이 땅으로부터 떠 있는 철조망)에서 살아온 반달가슴곰들이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게 해 줄 수 있을까.

지난달 30일 전국 첫 공영 사육곰 생추어리(동물 보호시설)로 지리산 자락에 개관한 ‘구례 곰 마루 쉼터’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시설이었다. 곰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곳으로,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길러지던 사육곰 10마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환경부와 구례군이 조성해 국립공원공단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국가가 운영하는 생추어리는 이 곳이 처음이다. 민간에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종돈장과 실험실에서 구조된 돼지가 사는 ‘새벽이 생추어리’와 폐업한 농장에서 구조된 사육곰이 지내는 ‘화전 곰 보금자리’, 2021년 구조된 홀스타인종 소가 머무는 ‘달뜨는 보금자리’ 등 민영 동물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일 시설에서 만난 곰들은 ‘착취’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10마리 곰들 중 한 마리는 다리 3개가 절단돼 뒷다리 하나로 몸을 지탱했고, 다른 한 마리는 치아가 몽땅이로 빠져 있었다. 시력을 잃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곰들이 오랜 사육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낯선 이의 인기가치가 느껴지자 벽에 등을 붙인 채 경계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입소한 지 2주가 된 곰들은 여전히 사람과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적응기를 보내고 있었다.

시설은 이들 곰에게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다. 지리산 자락 2만5744㎡ 부지에 연면적 1506㎡ 규모로 조성됐으며 3개 동(30실)에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마리 당 15㎡의 방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맨바닥을 밟고 거닐 수 있다.

단독 생활하는 곰의 특성에 맞춰 두 실 당 하나의 중간 방사장을 마련하고, 나무를 타고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운동장에는 2층 전기울타리와 날카로운 발톱에도 잘 뚫리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설에는 수의사 3명과 사육사 6명 이상이 상주하며 곰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살피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곰들은 정확한 나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곰은 치아 상태나 몸무게 등으로 나이를 가늠하는데, 이곳의 곰들은 오랜 사육 환경 탓에 치아가 대부분 손상돼 있고, 몸무게도 정상 범위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14~2017년 곰의 증식을 막기 위해 전국 사육곰 농가를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어렴풋이 10세 이상이라는 점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곰 사육 산업은 지난 1981년 정부가 웅담 산업을 장려하면서 시작했다. 한때 전국 160여 농가에서 1400마리 이상이 사육됐지만, 산업이 사양화되며 불법 증식과 도살, 밀매가 이어졌다.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 한국사육곰협회, 시민단체, 지자체(구례군·서천군)이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위



지난달 30일 구례군에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오른쪽)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이송된 사육곰이 우리 안에서 쉬고 있다.

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2023년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육곰 사육과 웅담 생산·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곰 농가들은 올해 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체를 처분하거나 보호시설에 이송해야 하며, 이후에는 사육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어웨어 등 4개 시민단체는 후원금을 모아 사육곰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구조된 곰들은 구례로 이송되거나, 추후 개관 예정인 충남 서천(70마리)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신창군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장은 “처음 시설에 이송됐을 때 농가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대부분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사육곰이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사육곰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사육곰이 전국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240여 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10여 마리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운영하는 민간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사육곰 구조를 위해 농가와 접촉할 계획이다.

강재원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보호시설 개소

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예산에 사육곰 매입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농가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은 지어졌는데 머물 곰들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라며 “사육곰 산업이 사양화되고 곰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보호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더 늦기전에...

시민군 잇따라 사망...발포 명령자 규명 등 숙원 해결 시급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와 맞서 싸웠던 시민군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5·18 당사자들이 45년 세월을 차레로 고령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발포 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등 완전한 진상규명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그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11일 광주지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군 민원부장’ 고(故) 정해직 선생에 대한 영결식을 엄수했다.

정 선생은 5·18 당시 시민군 민원부장으로,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재진입 작전까지도

전남도청을 지키며 부상자 접수, 실종자 가족 민원 등을 도맡았다. 이후 계엄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은 정 선생은 파킨슨병을 앓다 지난 9일 별세했다.

지난 7일 ‘5월 사진가’ 고(故) 김향득 작가가 별세했다.

김 작가는 1980년 대동고 3학년이던 때 시민군으로 5·18에 참여해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상무대 영창에 투옥됐다. 이후 전남도청이 납약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접한 후부터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5·18 광장의 행사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가을비 오락가락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4일까지 10~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5~16일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 사이에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당분간 평년(아침 최저 9~16도, 낮 최고 22~24도) 기온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를 보이고,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가 예상된다.

17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다가 주말인 18일~19일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여순사건 항소 안한다”더니...법무부 ‘이랬다 저랬다’

발표 하루 만에 다른 사건 항소했다 유족 반발에 취하 ‘춘곡’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다른 여순사건 손배소 사건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족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검찰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항소 제기 지휘를 내려서 생긴 일이다. 항소는 취하하겠다”고 밝히는 등 춘곡이 벌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여순사건 피해자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9일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각각 여순사건 피해자·유족 등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등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순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부는 항소장을 접수하고 기존 항소 취하도 하지 않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배소 변호를 맡은 서희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낼 때는 여순사건 관련 손배소 전반에 대한 항소

포기 기조를 세운 것처럼 밝히더니,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지금도 여순사건 항소심판 5건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을 보아서는 법무부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12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제기 지휘를 해 항소장이 제출됐다”며 “법무부의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었다”고 뒷수습에 나섰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